



[금융]
법정구속 피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기 경영 본격화
05

‘정의선의 혁신’ 통했다 현대차 매출 100兆 돌파

현대·기아차 2019 경영실적

신차·SUV 인기, 환율상승 효과
현대차, 창사이래 첫 매출 100조
기아차는 58조… 전년비 7.3%↑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혁신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 됐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혁신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첫 100조원 넘는 매출액을 달성했다. 기아차 역시 최초로 ‘북미 올해의 차(SUV 부문)’에 이름을 옮리는 등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하는 한해를 보냈다.

현대·기아차는 2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2019년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열고 지난해 연간 실적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양사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 수요 침체 속에도 고수익 신차종 판매 확대를 통한 판매 믹스 개선과 함께 환율 영향으로 한층 개선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와 코나 등 SUV 판매 호조와 환율상승 효과로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3조6847억원으로 전년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진행된 2020년 신년회에서 세해 메시지를 통해 올해부터는 미래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보다 52%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105조 7904억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어났다. 영업이익률은 3.5%로 1%포인트 상승했다. 순이익은 3조2648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판매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장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물량 운영과 지속적인 신차 출시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

획이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목표로 국내시장 73만2000대, 해외시장 384만 4000대를 더한 총 457만 6000대를 수립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97억원으로 전년보다 73.6% 증가했으며, 매출은 58조1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났다. 순이익은 1조8267억원으로 58% 증가했다. 기아차 실적 상승은 ‘북미 올해의 차(SUV 부문)’에 선정된 대형 SUV 텔루라이드, 인도와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SUV 셀토스 등이 이끌었다.

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2019년 말부터 핵심 신차 출시가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골든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이들 신차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수익성을 지속 개선 시킬 계획이다.

기아차는 올해 판매 목표로 지난해 실적 대비 4.9% 증가한 296만대(CKD 포함)로 잡았다. 국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2만대, 해외는 전년 실적 대비 약 6% 증가한 244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보다 52%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105조 7904억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어났다. 영업이익률은 3.5%로 1%포인트 상승했다. 순이익은 3조2648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판매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장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물량 운영과 지속적인 신차 출시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

재정쏟아 지킨 2.0% 성장… 10년 만에 최저

정부 성장률 기여도 1.5%p
민간 기여도는 0.5%p 불과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세다. 그나마 연 2%대 성장률을 사수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다. 투자는 바닥을 쳤고 수출과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1분기 -0.4%로 역성장한 뒤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2분기 1.0%로 반등했으나 3분기 0.4%로 주저앉으며 연 2%대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정부가 막판 부양에 나서며 4분기 1.2%를 기록, 연 2.0% 성장에 ‘턱걸이’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3.2%) 이후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다. 전년(2.7%) 대비로는 0.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성장률을 소수 둘째 자



리까지 보면 2.01%로 연 2%대를 겨우 사수했다.

◆ 정부가 밀어올린 연 2.0% 성장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사실상 정부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소비는 전년 대비 6.5% 증가해 지난 2009년(6.7%)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1.9%로 1년 전(2.8%)보다 낮아졌다. 연간 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는

1.5%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2.3%포인트) 이후 최대치다. 사실상 지난해 성장률 2.0%는 정부가 메운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성장률 2%대 달성을 위해 상반기부터 재정집행에 나선 바 있다. 반대로 민간의 기여도는 0.5%포인트로 정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 성장을 꺾은 투자, 부진한 민간소비

지난해 투자는 고꾸라지며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5%포인트, -0.7%포인트로 모두マイナス(-)를 기록했다.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건설투자는 3.3% 감소하며 2년 연속マイナス(-)를 이어갔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2012년 이후 처음이다. 설비투자는 8.1% 감소해 2009년(8.1%) 이후 가장 낮았다.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의 여파가 컸다.

수출도 부진했다. 지난해 수출은 1.5% 성장하며 2015년(0.2%)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h89@



22일 오후 설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벌써부터 살바싸움

최저임금연구원 개최 입장차만 확인
소상공인, 설문조사 통해 여론전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 살바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되는 분위기다.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계는 30년 이상 유지해 온 해묵은 제도를 올해엔 반드시 뜯어고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차등 적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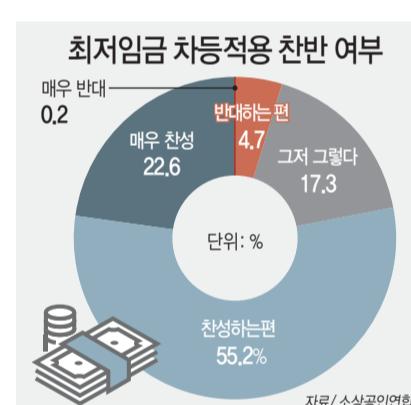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최저임금연구위원회는 올해 첫 만남자리를 최근 가졌지만 양측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서 회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7~8월께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숙박, 음식점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6.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부담이 크다’는 답변도 25.8%에 달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76.3%가 ‘반대’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77.8%가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차등 적용 방법’에 대해선 업종별 > 규모별 > 지역별 순으로 많았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놓고 논의 하던 2017년 당시 경영계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실, PC방, 택시, 경비업 등 8개 영세업종에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제기됐던 내용은 같은 업종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고,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될 만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여기에 정책 결정 당사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도 한 몫 했다.

최저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계도 그동안 꾸준히 구분 적용 등을 통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다. 최근 열린 최저임금연구원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경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 했지만 관련 데이터 생산의 어려움, 비용 등 현실적 문제들만 거론됐을 뿐 건설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이미 업종별, 사업자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놨고, 여기에 기업 규모까지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독자 여러분
즐거운 설 보내세요!